

북한, 광주수영대회 참가 곧 통보

광주시, 러시아서 물밑 접촉
“참가로 급선회...내일 답변”
응원·공연단 파견은 힘들 듯



“北선수단 광주로 오세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 북측 선수단의 참가를 요청하는 광주시민 한마음 대회가 3일 오후 광주시청 광장에서 열렸다.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시민들이 한반도기와 노란 풍선을 흔들며 북한 선수단의 대회 참가를 호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의 최대 흥행 이슈로 꼽히고 있는 북한 참가 여부가 오는 5일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때 국제수영연맹(FINA) 측에 불참 의사를 밝혔으나 지난달 30일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이후, 러시아 모처에서 광주시 측과 만나 참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 같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오는 5일께 북한이 최종 답변을 주기로 했다”며 “북측이 참가 쪽으로 기운 것 같다”고 전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정부와 정지권을 통해 북한의 대회 참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번 대회에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권의 43%가 배정된 점, 북한이 그동안 FINA 대회에 꾸준히 참가해왔고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대회 참가를 독려했다. <관련기사 2·3면> 다른 한편으로 광주시와 대회조직위는 북측과 물밑 접촉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최근 남북미 정상들의 판문점 회동이 이뤄지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

면서 북측으로부터 ‘대회 참가 방항으로 검토 중이며, 최종 방침은 5일께 표명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설명대로 북한의 대회 참가가 공식화된다면 단순히 수영대회 흥행을 넘어 7월 한 달간 세계의 눈이 광주로 온통 집중

될 것으로 보인다. ‘평화의 물결 속으로’라는 이번 대회 슬로건처럼 광주수영대회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다만 광주시는 선수단 외에 응원단·예술단 파견은 현 단계에서 북한이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의 참가 선수단 규모가 크지 않고 수영이라는 단일 종목이라는 점, 대회 참가가 막판에 갑작스럽게 검토되고 있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호 기자 khh@kwangju.co.kr

알립니다

광주세계수영대회 특별취재단 운영

지구촌 최대 규모 수영 축제인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 광주에서 열립니다. 다가온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정확하고 현장감 넘치는 뉴스를 전하기 위해 특별취재단을 운영합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사진부 등으로 구성된 특별취재단은 대회상황과 경기소식, 선수들의 생생한 화제를 발굴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 특별취재단

- ▲ 단장=윤영기 체육부장·최권일 정치부 부장 ▲ 취재팀장=김여을 체육부 차장 ▲ 취재=김형호, 김용희, 박기웅, 정병호, 김민석(사회부), 백희준(경제부), 유연재(문화부), 김한영(체육부), 김대성 차장, 김지을 차장, 김창화 차장(전남본부)
- ▲ 사진=나명주 부장(문화2부), 최현배 부장, 김진수 차장(사진부)

정부 “北북선사건은 경제작전 실패”

합참의장 경고·8군단장 보직해임...“사실 은폐는 없어”

합동조사 결과 공개

정부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관련, 관련 군부대들의 경계근무태세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이와 관련, 국방부는 북한이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하위보고·은폐 의혹’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국무조정실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군 당국이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부는 “해안경계작전은 레이더와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에 포착된 소형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간·야간 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해안감시에 공백이 발생했으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결과적으로 북한 소형 목선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인구 대비 기반시설 과잉...전남 시·군 ‘과잉도시’ 전략하나

미래인구 과다 설정 개발계획
도시정체성 상실 우려 목소리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중소도시 도심 및 읍·면 중심지가 인구 감소, 고령화, 외곽 주거지 개발 등으로 쇠퇴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이들 도심 및 중심지 300m 이내에 행정·의료·금융·교통 등 공공시설을 집적시키는 ‘압축도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압축도시’는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 도심 및 중심지를 고층·고밀로 개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방법으로 거주 및 유동인구를 창출함과 동시에 외곽 개발 지양, 녹지 보존 등을 그 취지로 하는 도시정책이다. 이 같은 전남도의 정책에 따라 22개 시·군 가운데 2018년 말까지 15개 시·군이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면서 압축도시 공간 구조를 포함시켰고, 7개 시·군이 현재 도시·군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압축도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시·군의 현실적인 여건이 불리한데다 공공시설을 집적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재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뒤따르지 못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기에 이미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외곽 주거지로 이전한 공공시설들을 도심 및 중심지로 다시 옮겨오는 것에 대한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실정에서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것 역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또 전남지역 22개 시·군이 압축도시 정책을 도입하면서 미래인구를 과도하게 설정해놓는 과거 도시개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22개 시·군의 도시·군관리계획상 목표 인구를 모두 합하면 247만4000여명으로, 2018년 말 현재 전남도의 인구(191만6000여명)보다 55만8000여명을 초과하고 있다. 시·군이 인구를 부풀려 이를 명분으로 외곽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의미다. 이들 시·군은 인구 감소를 전제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압축도시 정책과 외곽 도시개발을 병행하는 이 같은 도시정책으로 인해 주거지와 공공시설이 인구, 경제 규모 등에 비해 과도하게 공급되면 결국 그 부담은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미칠 전망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동구 재개발의 최대 수혜지역 |
모아미래도에서 시작됩니다

광주 총장의 모든 기대와 상상이 모아미래도에서 현실이 됩니다.
프리미엄의 놀라운 내일이 펼쳐집니다.

상상 그 이상의 미래를 보다! **총장 모아미래도**

방문자 사은품 증정 이벤트
컵라면 6개입 (전원 증정)

전세 입주 희망자 선착순 모집

7월 5일 GRAND OPEN

- 금남로4가역 초역세권**
- 광주천, 공원 특급조망권**
- 최첨단 IOT 시스템**
- 8만 5천여 배후수요**
- 풍부한 개발프리미엄**

문의 062) 720-6363

시행 **M** 대한투자신탁(주)
시공 **M** (주)모아종합건설 남광건설(주) 남광산업(주)
위탁 **M** 디에치도시개발(주)

총 439실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